

데스크 시각

‘모범생 출사표’는 필요없다



박치경 편집부국장·사회부장

언제부터인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은 출사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산업 육성’ 그리고 ‘인재 키우기와 일자리 창출’ 누가 먼저랄 것 없이 20년 동안 변함없는 모범답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대로 실천했다면 모든 지자체는 주민이 잘 살고 관광객이 북적거리며, 똑똑한 인재가 넘쳐나는 이상향으로 탈바꿈했어야 했다.

그러나 (특히 전남 농어촌 지역 중심으로) 실상은 어떤가? 젊은이들은 해마다 도시로 빠져나가 노인들이 겨우 논밭을 지키는 현형이다. 외지에서 관광객은 많이 들어오는가? 일부 유명지역을 제외하면 황량한 시골풍경에 제대로 먹고, 자고, 볼 것이 없어 최근 부쩍 늘었다는 중국 방문객은 커녕 낮 빛 고온 도화사람들 발길도 구경하기

어렵다. 지역인재 육성은 또 어떤가?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은 중학교를 마치자마자 부리나케 광주나 수도권으로 발길을 돌리는 바람에 부모들은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야 한다. 이런 실정이나 “천지개벽하겠다”며 사자후를 도했던 대다수 단체장들의 성적표는 초라할 수 밖에 없다.

완도와 장흥을 보라

물론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한 이들도 있다. (전남에서 경제기반이 다른 목포·여수·순천·광양 등은 제외) 대표적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이가 김중식 완도군수다. 3선 출마 제한에 걸려 일직잡지 불출마 선언을 한 그는 임기 내내 전북양성애 운명을 걸어 완도를 ‘전북수도’로 만들었다. 연간 매출이 5000억 원에 이르고 전국 생산량의 81%를 점유하게 됐다. 도시 붐급증이 젊은이들도 전북 따라 귀향해 외제 승용차를 굴리는 이까지 생겨났다. 또 영화 ‘서편제’에 잠깐 스쳐갔던 청산도를 슬로시티로 가꾸어 전국적인 관광지로 탈바꿈시켰다. 이쯤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근접했다는 평가가 충분하다. 근세가 크지 않은 장흥도 꺾목할 만하다.

우드랜드 휴양림 조성과 ‘장흥삼합’(쇠고기·표고버섯·키조개) 등 특산물 개발로 전국에 이름을 날려 주민 살림살이를 크게 퍼준 케이스다. 군수가 사법처리를 불사하고, 노력도에서 제주행 페리를 빨리 취항시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기도 했다.

반면 서기동 구례군수는 뇌물사건에 휘말려 무죄판결을 확정받긴 했지만,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주민소환 투표에 부처진 단체장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더불어 임기 동안 결재도장만 누르며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모를 정도’라는 편지를 받아야 할 단체장이 수두룩하다.

내년에 새로 뽑히는 전남 시·군의 단체장들이 지역을 어떻게 일궈야 하느냐는 물음엔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에 더 집중하라”고 답하고 싶다. 어려운 여건에서 시원치 않은 기업 유치나, 관광활성화 같은 헛구호만 외치지 말고 지역 비교우위가 무엇인가를 파악해 집중 투자하고 매진하라는 것이다.

최근 농업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전남군의 2012년 농업생산액은 7200억 원으로 농업경쟁력 지표가 전남 1위, 전국 6위를 기록했다. 고구마 연 매출액만 5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해남군은 3년이 지나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축수산업 매출 1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세워놓고, 2014년에 관련예산을 집중 배정했다는 소식이다.

비교 우위에 승부 걸어야

해남이 깨닫고 영양가 높은 농수산산물로 국민을 먹여살릴 방도에 치중한 건 방향을 잘 잡은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해남은 ‘대한민국 식량창고’가 돼 더 부유해지고, 전국적인 명성을 얻을 것이다. 중국과 가깝고 ‘땅굴’이라는 우위 자원을 활용해 관광에도 신경 쓴다면 금상첨화라 하겠다.

내년에 선거에 출마하려는 단체장 후보들은 완도·장흥·해남과, 지지부진했던 시·군의 사례를 유심히 살펴보길 권한다. 경쟁력이 떨어져 기업이 들어오지도 않을 산단을 만들었다가 텅텅 비어있는 곳이 한 둘 아니다. 정발 돈이 되고 경쟁력 있는 목표를 세워 전남도로, 중앙부처로 열심히 뛰어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약속한다면 당선권에 가까워질 것이다.

지방 선거를 위해 뛰고 있는 후보들에게 재삼 당부하고 싶다. 안될 줄 뻔히 알면서 구색만 맞춰 ‘총체적 우등생’이 되겠다는 출사표일탈 과감하게 찢어버리라고..

/unipark@kwangju.co.kr

社說

지방선거 장애인 사전투표 대책 급하다

내년 6·4 지방선거 때 광주에서 처음으로 사전투표(내년 5월 30일~31일)가 실시된다. 투표 당일 응무가 있는 유권자들을 위해 마련한 제도로, 투표용제고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표를 조사해보니 장애인들의 참정권이 제한받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광주시 선관위는 사전투표제 도입을 위해 지난 9월16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 광주 95곳 동(洞)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투표소 설치 장소에 대한 기초 자료 조사를 했다고 한다. 국가 전산망 설치 및 면적·위치 등을 파악해 적합한 투표소를 확인한 결과, 95곳 중 85곳이 계획 17개만 행사 시설이기에 어떤 제도에 설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무슨 이유로든 장애인들의 소중한 한표가 사장(死藏)돼서는 안 된다. 평소 할말을 다 전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선거와 투표는 마음속 구석진 소리를 전할 수 있는 흔치 않은 통로다. 그만큼 절실한 17개만 행사 시설이기에 어떤 제도에 설치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빠짐 없는 참정권 행사’라는 사전투표제의 기본취지를 위해서라도 장애인 투표 대책은 최우선시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광주시 선관위는 물론 시와 각 구청이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정부, 광양항 홀대해 군소항 전락시킬건가

국제 물류 기지인 광양항이 정부의 홀대로 흔들리고 있다. 지금까지 일관되게 유지해온 광양항과 부산항의 ‘투포트(Two-Port) 항만정책’이 사실상 무너지면서 광양항이 부산항에 치어 인천항 등에도 밀리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정부의 광양항 지원예산은 2009년 1,939억 원에서 2010년 911억 원, 2011년 677억 원, 2012년 406억 원으로 극감했고, 올해는 120억 원에 불과해 국내 6개 항만 가운데 가장 저조하다. 반면 부산신항의 올해 예산은 1,330억 원, 인천북항 및 신항은 1,130억 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광양항은 항만 화물 수송량 전국 2위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체선율이 국내 항만 중 가장 높은 5.0%(부산항 0.34%)에 달해 손실비용만도 428억 원에 이른다. 여기에 정부의 광양항 개발계획도 2000년 이후 3차례나 변경되는 등 향후 개발 의지마저 찾기 어렵다.

실제 14개 선석으로 연간 460만 TEU의 화물 처리가 가능한 광양컨테이너 부두는 개장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항만 개발의 성공 적인인 처리 물동량은 하역능력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항만 활성화의 필수조건인 배후단지 역시 광양항에는 국내 업체 17개만 입주해 있어 물동량 증가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광양항이 천혜의 항만조건을 갖추고, 여수산단 등 주변 산업벨트가 형성돼 수출입 전초기지로 최적지이지만, 정부의 잘못된 항만정책과 예산 홀대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미래 국가경쟁력을 위해 투포트 정책을 허물어선 안 된다. 광양항은 애초 미주지역과 아시아 등지를 겨냥해 건설된 국제적 항만이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광양항의 국제 및 국가 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해 정부가 획기적인 지원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은펜칼럼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



최영태 전남대 교수·역사학

국 권력의 중심 자리를 차지했던 대구·경북 지역도 총정권과 똑같이 약 15%에서 10%로 줄어들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영호남 모두 2류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는 점에서는 똑같은 처지이다.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지역 간 갈등의 핵심 의제는 영호남간의 문제였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대립전선이 점차 수도권 대 지방의 문제로 이동해가고 있는 추세이다. 수도권 대 지방의 대립구도는 영호남의 문제보다 훨씬 구조적이고, 그만큼 해결책을 찾기도 어렵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수도권 비례와 지방의 쇠락 현상을 지금처럼 방지할 경우 수도권의 주거난·교통난·환경오염, 지방민들의 2등 국민화에 대한 분노와 자괴감 등 그 후유증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남북한의 통일기반 조성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통일된 후 북한 주민들이 2등 국민, 3등 국민 취급을 받게 된다면 그들이 과연 통일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일단 총론에서는 동의하나 각론 단계로

넘어가면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수도권 주민들 대다수는 지난번 수도권전 논쟁 때처럼 지역균형발전론에 대해 탐탁치 않게 생각하거나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다. 특히 30대 이하 순수 수도권 출신 젊은이들에게서 이런 경향이 강하다.

국가 간의 무한경쟁 심화, 광역경제권 구축이 세계적 추세라는 점 등을 이유로 수도권 지차단체장들의 수도권규제 완화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들도 거기에 가세하는 추세이다.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기업들은 수도권규제 완화를 더욱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쇠락은 더욱 심화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현재 미국, 스위스, 독일 등 다수의 나라가 양원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 경우 상원은 대개 지역을 대표하면서 국가의 균형발전책을 견인해 내는 역할을 한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권력 분산을 위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기회에 국가적 과제인 지역균형발전과 남북통일의 여건 조성을 위해서라도 양원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더 나아가 미국, 스위스, 독일처럼 광역경제(생활)권을 기본 단위로 한 연방제적 국가까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광주·전남을 하나의 광역경제(생활)권으로 설정, 정치·행정·재정권을 대폭 강화한 독자적인 자치행정단위를 만드는 방식으로 전국을 재편하는 것이다. 지역에 토대를 둔 정치권과 광역지차단체장, 시민사회가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을 위해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할 시점이다.

지역 간 동반성장의 분위기 마련을 위해서는 영호남간의 대립구도 완화와 선결과제이다. 양 지역 간의 소모적인 지역대립을 극복해야만 정치가 정상화되고 그래야만 국토의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을 위한 합리적 논의 가능해진다. 영호남이 손잡고 권력 분산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헌법 개정의 방향 및 필요성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시작해보자.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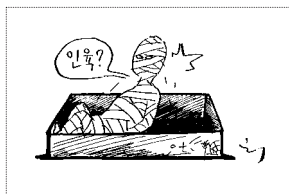
無 等 鼓

이집트의 미라는 영원의 상징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골칫거리이기도 했다. 사람들은 영원히 살기 위해 왕을 비롯해 자신과 가족, 이웃들을 미라로 만들었다. 덕분에 기원 전 3000년부터 기원 후 500년에 이르기까지 만들어진 미라는 무려 수백만 개에 이르고, 이집트의 모든 무덤과 동굴에는 미라가 넘쳐났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미라를 다

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19세기 당시 목재나 석탄이 귀했던 이집트에서는 미라가 기관차 대체연료로 사용됐다. 미국작가 마크 트웨인은 이집트 여행 도중 기관사가 “아니 이 평민 녀석들은 왜 이렇게 잘 안타는 거야. 어이,

다이리트 특효약!”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소개했을 정도다.

인육캐슬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미라 가루의 인기도 떨어졌다.

지난해 세간을 떠돌썩하게 만들었던 인육캐슬이 최근까지도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다. 2~3년 전 ‘건강 특효약’으로 소개됐던 인육캐슬이 이번엔 왕 한 번 배워봐!”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소개했을 정도다.

미라는 또, 서민들의 취사용 빨감이나 비료, 지붕덮개, 화가들의 물감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미라는 특히, 중세부터 유럽이나 중동에서 의약품으로 사용됐다.

17세기 유럽에서는 미라 가루가 타박상, 골절, 간질환, 미비증, 편두통, 간질,

/홍행기사회1팀장 redplane@kwangju.co.kr

기고

바람직한 복지재단의 미래상

지역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타시도와 같은 시스템의 복지기관을 운영하기 어렵다. 그래서 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 행정기관과 자원봉사단체의 의존도가 높고, 특히 복지재원의 부족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신안군에서는 소외계층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복지재단을 설립했다.

우리 재단에서는 도서지역의 부족한 복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역 내 어려운 분들의 절박한 상황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리고, 그 결과 연간 2억가량의 기부 금품을 복지소외계층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소액기부운동을 통해 좀 더 많은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공부방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 모금 캠페인을 하였고, 그 결과 박유천 권력업인 ‘블레스싱 유전’에서 아동 도서 9000여권과 후원금 500만원을 지원받아 ‘박유천 도서관’으로 명명하기로 하였다.

또한 생계, 의료, 주거환경, 결연사업, 아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사업을 진행하여 연간 400여세대를 지원하였다. 무엇보다 도서지역에 대한 재능기부 확산을 위해 1004 재능봉사단을 조직하기도 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인사(人事)와 지자체의 역할이다. 인사가 만사란 말이 있다. 특히 복지재단의 업무는 휴먼서비스로 인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인도 목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고, 전 직원이 사회복지전공자들이다. 또 본인이 이사장직을 맡는 동안 지자체의 간섭이나 인사 청탁 등 무리한 요구를 받아본 적이 없으며,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은 물론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이처럼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창의적인 복지정책을 수립과 기금모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지자체의 복지재단 설립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언론기관의 기사를 통해서 나타난 지자체의 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복지재단 운영에 있어 민간복지전문가를 활용해야한다. 사회복지 경험이 풍부한 이사장과 사무국장이 필요하다. 실력이 있으면 누구나 채용하는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무리하게 비전공자나 퇴직 공무원 등을 채용하여 시민들에게 제 식구 심기라는 인식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복지재단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고, 지자체에서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물론 지역 내에서 다양한 복지기관들이 존재하지만 대부분 국가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복지재단은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와 정책 개발에 주력해야 하고, 따라서 지자체는 이를 적극 지지해 주어야 한다.

셋째, 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 철저한 심사 기준이 확립되어야 한다. 선심성 지원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복지재단 주요 재원은 후원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함에 있어 신뢰성과 투명성 그리고 사업의 효율성이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는 이전 참여정부 이후 지속되면서,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 기관들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조정할 복지기관이 부재한 상태이다. 이러한 부족한 현실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복지재단의 몫이라고 본다. 지금 그 첫 발을 내딛는 시기이다. 주민들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언제든지 문을 두드릴 수 있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복지재단이 되도록 신안복지재단은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앞으로 설립될 복지재단들의 귀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汶洙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奇賢鎔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업1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7-9600> <F A X 227-9500>
편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매체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정 치 부 2200-612	체 육 부 2200-697	디지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대표 FAX 222-4267>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